

04

문화·예술

- 1. 포용적 문화정책의 쟁점과 과제_ 박경동 102
- 2. 포용사회와 이주민 - 포용·공존의 사회로 가기 위한 탐색_ 선봉규 109
- 3. 지역 회복을 위한 되살림 관광: 재생과 자생을 통한 포용적 로컬관광_ 이숙영 117
- 4. 포용사회와 예술의 역할, 디지털 포용과 지역 예술가_ 장용석 124

포용적 문화정책의 쟁점과 과제

박경동

광주문화재단 지역콘텐츠팀장

‘포용적 문화정책’의 기본은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더 이상 문화검열은 없어야 한다. 시민들을 위해 문화기반시설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시설 운영 패러다임을 ‘전시물’이 아닌 ‘관람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도심재생에 참여한 예술가들은 쓸모가 다한 후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익 배분에서 배제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키워드 : 포용적 문화정책, 문화검열, 관람객 중심, 문화적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예술가 배제

1. 포용국가 담론과 문화정책의 조우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고,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국정목표 3)의 전략과제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가 제시되었다. 이후 2018년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는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비전으로 설정하였고¹⁾, 2018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정 비전으로 추진한다고 선언하였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에도 불구하고, 성과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이 다수이며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도 낮은 수준²⁾이라는 진단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상한 계기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 방식으로는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의 심화와 4차 산업혁명과 젠더갈등, 환경문제 부각 등 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명시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현 정부의 국정비전이자 전략 목표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사회 전 영역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안착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³⁾.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취약성이 명확히 드러났다. 창작물 생산까지 장기간의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국제교류 활동이 많으며, 밀폐된 장소에 최대한 많은 관객을 동원

1)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18.9.11.)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12쪽 참조.

2) 최현수외, 2019, 「포용국가 비전 및 전략기반 사회정책 통계지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특히 지난 4년간 빈곤·불평등 완화, 국가돌봄 책임 확대 등 포용국가 정책의 성과도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안전망의 약한 고리들이 노출됨에 따라 평등과 포용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이 주된 목표로 부각되었다.

해야 수익을 얻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⁴⁾는 것이 취약한 이유다. 다수의 예술인이 멸종위기에 처한 상황 속⁵⁾에서 포용정책을 논한다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며 의미도 깊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에서 문화 관련 정책은 어떤 위상을 지닐까?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전략 7 : 인적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처럼 핵심의제가 아니라 주변부처럼 소개되고 있다. 오히려 문화 현장에서는 의제를 넘어 이미 실천으로서 다종다양한 포용정책들이 진행되어 왔다. 간략히 소개하자면 문화소외계층의 향유권 신장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문화시설이 부족한 도서·산간 지역 및 문화향유가 제약된 군·부대 교정시설과 병원과 노인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순회하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신나는 예술여행,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무지개다리 사업, 주5일제 수업의 정착됨에 따라 시행된 토요일문화학교 등 포용정책과 관련한 문화 사업은 여러 분야에서 실행되어 왔다. 다만 다종다양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묶어낼 총체적인 개념이 없었고, 개별사업의 역할 이외 국가전략의 핵심적 아젠다로서 위상을 정립하진 못했던 것 같다. 이는 포용국가 담론에서 문화정책과 사업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문화정책 분야에도 포용국가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정책연계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더 많은 과제와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총체적인 삶의 양식인 문화 분야와 포용국가 정책이 어떻게 조우하는지 살펴보고 쟁점을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포용적 문화정책의 한계와 가능성을 점검할 것이다.

2. 포용적 문화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몇 가지 쟁점

포용(inclusion)은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타인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인다는 용어⁶⁾로 '배제(exclusion)⁷⁾'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문화정책은 문화적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구상하고 그에 따른 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분배하는 공적행위라 할 수 있다⁸⁾. 따라서 포용적 문

4) 양혜원, 2020 「위기의 시대, 문화예술의 새로운 전환모색」2020 아시아문화포럼 발표 자료집, 93-95쪽.

5) 광주 예술인 간담회 내용 "예술 활동이 아예 없거나 80~90%가량 축소된 현실에서 생활세계는 점차로 위축되고 카드 돌려막기, 신용, 담보대출도 되지 않는 퇴로가 없는 위기로 몰리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모르겠다."(광주 거주, 남성, 60대, 전통공연단체 대표)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주소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7) 사회적 배제는 1960년대 프랑스의 경제 책임자였던 피에르 마세(Pierre Masse)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언급을 한 이후 광범위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학술적으로 사회적 배제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물질적·문화적·사회적 자원의 배분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개인 간의 사적인 호혜관계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와 그러한 상태를 만드는 과정을 모두 의미한다(박인권, 2015: 104).

8) 코토 카즈코 엮음, 2004, 『문화정책학』, 도서출판 시유시. 21쪽. 문화정책은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이다. 문화정책이

화정책은 성별, 인종, 종교, 계급, 장애유무 등 정체성의 차이나 삶의 방식의 차이로 인해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 활동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와 능력을 증진시키는 실천이며, 증진 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공적행위라 정의할 수 있다. 포용적 문화정책의 개념과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와 향유자의 역할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오늘날 창작자와 향유자의 경계가 약화되고, 일상이 곧 예술이 되는 현실에서 전통적 의미의 예술영역과 예술가의 입지는 매우 좁아진 게 사실이다. 특히 디지털 기반의 창작도구를 활용한 수많은 장르가 생성되고 창작물이 유통되는 현실을 볼 때 문화 예술인은 더 이상 특정장르 종사자로 한정지을 수 없다.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이제 예술은 장르 간 융합, 경영, 산업, 신기술, 복지, 도시재생 등과 동거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대상과 지향성이 명확하기에 창작자와 향유자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특히 창작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문화예술 향유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예술가들이 이익분배 과정에서 어떻게 배제되는지 등을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검토할 것이다.

1) 창작자를 위한 포용적 문화정책 : 문화검열은 이제 그만

예술가의 창작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아트마켓, 아트페어 등과 같은 유통 플랫폼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늘리거나 문화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을 늘려 예술가의 설 자리를 늘려주는 방법도 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은 국가나 사회가 예술가로서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예술가로서 자존의 기본이 되는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실천은 쉽지 않은 것 같다.

문화사적으로 예술 창작물에 대한 통치 권력의 검열은 항상 있어왔고 여전히 도처에서 지속되고 있다. 중국 진시황의 분서갱유, 조선시대 정감록 및 천주실의 등의 금서, 일제 강점기 언론검열과 탄압, 유신 및 권위주의시대 '금지곡', '불온서적' 지정, 1999년 영화 '거짓말'의 등급부여 보류 조치, 최근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까지 통치 권력은 제도적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창작물을 검열하고 관리해 왔다. 과거의 검열이 구속, 판금, 상영저지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예술창작을 억압했다면 최근에는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관리하기도 하고, 1만 명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작권을 침해했던 방식도 등장하였다. 통치 권력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억압적 수단을 동원하고

포괄하는 영역은 대단히 넓고, 그것은 개개인의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삶의 방식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산업과 도시발전과 연관성이 있고 앞으로는 교육, 의료, 복지등과 접촉될 것이다.

때로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동의를 구하기도 하는 등 획일적이지 않고 점점 더 유연하게 검열과 통제를 수행한다.⁹⁾ 검열은 단순히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통치 권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문화적 지배를 완성해 나가는 기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며 예술창작은 순수해야한다는 근본주의적 생각이 지배적이다¹⁰⁾. 이러한 분위기는 예술가의 현실 참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창작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 포용적 문화정책은 가난한 예술인을 구제한다는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창작동기를 북돋는 적극적인 정책이어야 하며 그것의 기본은 예술가의 현실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2) 향유자를 위한 포용적 문화정책 : 문화기반시설 관람객중심으로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

포용국가 사회정책 비전 전략 및 추진계획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영역은 국민의 삶 중 '쉽' 영역에 포함되며 그 내용은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문화와 여가가 있는 생활을 찾아드리겠다” “국민 누구나 동네 가까이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라는 정책목표로 제시된다.¹¹⁾ 2019년 당시 자료는 문화예술 관람률이 대도시 85.2%, 읍면 71.7%라는 <2018 문화향유실태조사>에 근거한다. 특히 쉽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 과 문화시설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필요함을 진단한다. 또한 주요과제로 문화기반시설 건립을 지원하여 2018년 2,791개소를 2022년 3,288개소로 늘리는 것을 성과목표로 제시한다. 중간점검 차원에서 2020년 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기반 시설은 3,017개소로 2019년에 비해 6.8% 상승했고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박물관(897개)과 미술관(267개)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8.5%에 달한다.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지역 567개, 서울지역 410개, 강원지역 232개 순으로 나타났고, 인구 백만 명당 문화시설 수는 205.6개가 위치

9) “1980년대 예술검열은 이념적으로 문제가 되는 작품판매를 금하고 출판을 취소하거나 예술가를 정치사상범으로 간주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켰다.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드러난 최근의 검열은 전시를 못하게 하고, 지원리스트에서 배제시키고,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무력하게 만들며 윤리적 모멸감을 주는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검열을 경험한 예술가는 공공지원을 받기 위해 자기검열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자제한다”(이동현, 2017 『세월호 이후의 한국연극』, 한국연극평론가협회, 93-97쪽)

10) 모든 문화는 순수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표현이다. 서구에서는 예술가의 사회적 발언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피카소의 <게르니카>, 찰리체플린의 <위대한 독재자>와 같은 작품은 예술과 정치현실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작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예술가들의 현실참여는 검열의 대상이 되어왔다. 세월호와 5.18과 같은 시국사건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독재자 아버지를 풍자했다는 이유로 검열의 대상이 됐다. 예술에 대한 정치검열은 말 그대로 예술의 공공지원과 배제의 근거를 예술성, 작품성에 두지 않고 정치성에 둔다. 그 예술가가 누구를 지지하며, 누구를 비판하는가가 지원과 배제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 과정에서 정치검열은 정치적 진영 혹은 편가르기의 근거를 매우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회적 논쟁에 말을 걸고자 하는 모든 작품을 거부한다.

11) 최현수 외 2019. 「포용국가 비전 전략기반 사회정책 통계지표 개발」 보건복지부, 29쪽.

한 제주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¹²⁾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 달성을 위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일견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을 늘려 접근성만을 강조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목표 설정엔 아쉬움이 남는다. 문화시설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술 서비스를 시연하는 공간이기에 그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문화시설 수를 늘리는 것만큼 시설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미술관과 박물관을 가보면 ‘만지지 마시오!’ ‘사진 찍지 마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여전히 소장품과 유물 중심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람객은 항상 행동을 규제해야 하는 존재, 또는 전시기획자의 의도를 따라가며 배워야 하는 수동적인 관람의 객체로 제한이 된다. 전시콘텐츠 또한 중앙과 왕조 중심의 역사관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중심의 가치기준으로 평가된다. 결국 지역의 역사와 고유한 문화자산은 항상 부차적이고 잔여적 범주로 취급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포용적 문화정책은 문화시설 현황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시설관리 및 유물과 전시물 중심의 콘텐츠에서 관람객을 배려하고 열린 소통을 위한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과제라 생각된다. 또한 중앙과 왕조 중심 지배세력의 전시 콘텐츠와 더불어 지역의 문화자산의 중요성을 함께 소개하는 전시기획이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전시¹³⁾, 관람객과 관련해 인종, 언어, 성별, 장애 유무, 사회적 지위로 인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간 운영 매뉴얼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포용적 문화정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3) 문화적 도시재생과 예술가의 쓸모와 배제

도시재생 사업에서 ‘문화예술’은 중요한 전략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¹⁴⁾, 이미 국내외 여러 성공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다. 현재 광주에서는 19개 공간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¹⁵⁾. 특히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다양한 계층이 모여 있는 구도심의 재생은 문화예술과 결합되며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예술가들의 참여는 예술가들에겐 새로운 영역

12) 문화체육관광부, 「2020 문화기반시설 현황분석」

13) 다양한 관람객을 염두에 두며 전시해설문의 분량과 전시물의 높이를 고려하는 것부터 전시가 편안함, 힐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장이 되기를 지향하는 인식이 포용적 문화정책의 사례이다. 엄격하고 정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지적 접근에 집중하는 전시의 기존관념 즉 소통이 부족하여 재미없는 공간이란 중압감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14)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는 이미 고전이 되었다. 쇠락한 철강공업도시 빌바오가 구겐하임미술관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재생에 성공한 사례, 화력발전소를 재생하여 미술관을 만든 런던의 테이트모던, 한때는 예술의 거리로 명성이 있었던 뉴욕의 소호지구 등. 국내는 전통문화를 활용한 전주한옥마을, 근대유산을 활용한 인천아트플랫폼, 연초장 건물을 재생한 청주공예단지, 근대문화시설을 활용한 광주양림동, 수원 화성이 중심이 된 행궁동 도시재생이 대표 사례들 등이 있다.

15) 누리집, 도시재생종합정보 체계 2021. 12.10 검색(<https://www.city.go.kr/index.do>)

확장의 기회가 되었고, 삭막했던 토건자본 중심의 재생사업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현재 예술가들의 참여로 도시재생 사업 곳곳에 문화 행사와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센터들은 예술가들과 연계를 희망하고 있다. 물론 예술인은 개별적인 창작활동을 추구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건축업, 타장르 예술가, 기획자, 행정, 마을활동가...)들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예술가들의 생존과 지속을 위한 기회임에는 분명하지만 예술가가 소모되고 있고, 이익의 분배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이다. 임대료가 저렴한 공간에 예술가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독특한 분위기와 개성이 매력적인 공간을 형성하며 관광객이 증가했는데, 정작 임대료가 올라가며 원래 있었던 예술가들은 쫓겨나게 되는 상황을 도심재생이 일어나는 곳¹⁶⁾에서 여러 차례 목격했다. 창조도시를 주창한 리차드 플로리다는 ‘창조계급’이라 불리는 고속련의 혁신적 인재들을 도시에 유치함으로써, 엄청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창조산업의 생태계를 도시경제의 기반이자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화적 도시재생에서 예술가의 쓸모를 통찰력 있게 제시했지만, 창조의 이윤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포용적 문화정책이 개입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예술가들은 항상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구원투수처럼 호명이 된다. 그러나 그 쓸모가 다한 이후엔 투명인간이 되거나 소리 없이 사라진다. 레이몬드 윌리엄스(Williams, 1984)는 근위병 교대식, 국회의 개회식 장면처럼 문화를 국가의 권력 강화에 사용하거나, 경제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시로서의 문화정책(cultural policy as display)’이라고 명명했다.¹⁷⁾ 문화적 도시재생이 ‘전시로서의 문화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술가를 존중하고, 도시재생의 이익의 분배에서 예술가가 배제되지 않고 이익을 공유하는 포용적 문화정책이 성립되어야 한다.

3. 포용적 문화정책의 지속성과 희망사항

여기에서는 현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본적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문화영역으로 확장을

16)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국내외 문화적 도시재생 도시 곳곳에서 나타난다. 홍대거리, 경리단길 등 국내뿐 아니라 뉴욕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소호지구도 마찬가지다. 주킨(Zukin, 1995)은 소호, 브로드웨이 42번가, 브라이언트 파크 등은 모두 낙후되어 사라질 위기를 겪은 공간인데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주도하는 재생 활동을 통해 ‘아방가르드한 예술가’, ‘문화산업의 성지’, ‘도시 엘리트들의 쉼터’ 상징, 곧 이미지가 입혀졌다고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낙후되었던 과거나 역사적 맥락은 모두 지워졌으며, 새롭게 입혀진 이미지만이 남게 됐고 그 결과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성은 손실되며, 도시의 문화정체성 및 역사를 구성하던 원주민들을 새롭게 조성된 공간에서 배제되고, 전치되었다고 했다.

17) Williams, R. 1984. "State culture and beyond." pp. 3-5 in (eds.) L.Appignanesi. Culture and the state. London: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현안을 검토하며 포용적 문화정책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포용적 문화정책’의 기본은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제는 블랙리스트의 사건을 교훈 삼아 문화검열을 폐지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며 예술창작은 순수해야한다는 근본주의적 생각이 지배적인데, 이런 분위기는 예술가의 현실 참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창작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두 번째는 향유자를 위한 포용적 문화정책으로 문화기반시설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장품과 유물 중심의 시설운영이 아니라 관객 중심으로 시설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자산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전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전시, 관람객과 관련해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간 운영 매뉴얼을 갖추는 것이 포용적 문화정책의 선행조건임을 강조했다. 셋째,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서 예술가들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구원투수처럼 호명이 되지만, 그 쓸모가 다한 이후엔 투명인간이 되거나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포용적 문화정책은 도시재생에 참여한 예술가들이 이익 공유에서도 배제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포용적 문화정책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의 지지는 물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문화정책의 홍보, 지속적인 담론의 생산과 공유, 예산지원과 정책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포용적 문화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아마 축제 같은 이벤트일 것이다. 축제는 다양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특정시간, 특정장소에 가장 많이 모을 수 있고 시민들의 폭넓은 예술경험을 가능케 하는 문화예술 장르이기 때문이다. 포용적 문화 축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본다. 또한 포용정책을 공유하는 공론장을 통해 담론을 촉발시키고, 교류행사를 통해 동료로서 서로의 우정을 나누고 연대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앞으로 더욱 많아지길 희망해 본다.

포용사회와 이주민 - 포용·공존의 사회로 가기 위한 탐색 -

선 봉 규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오늘날 한국사회는 다인종·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이주민의 유형 또한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난민 등 다양한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19는 한국사회의 오래된 편견에 기반한 차별과 배제, 혐오 현상을 촉진시켰다. 문재인정부의 '배제하지 않는 포용'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사회구성원간의 불평등, 양극화, 차별, 혐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소한의 처방은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입법을 통해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포용·공존의 공동체적 삶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키워드 : 이주민, 포용, 공존, 사회통합, 광주공동체

1. 이주민: 유형 및 체류 현황

“...이민노동자들은 불사의 존재, 끊임없이 대체 가능하므로 죽음이란 없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태어나지도 않으며, 양육되지도 않으며, 나이 먹지도 않으며, 지치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단 하나의 기능 - 일하는 것을 가질 뿐이다.”¹⁾

위의 인용문은 1970년대 유럽사회의 이민노동자에 대한 묘사이다. 미국의 「포춘」지는 이민노동자들이 유럽경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영구적인 필요에 가까운 것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²⁾ 오늘날 한국사회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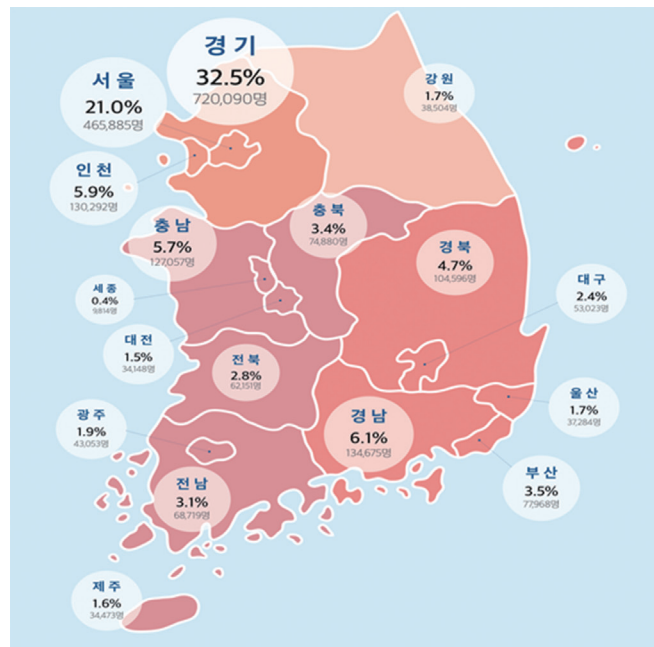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외국인 인력 및 다문화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월 기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은 2,216,612명이다. 외국인주민 수를 처음 조사한 해는 2006년인데, 당시 외국인주민은 536,627명으로 현재 4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주민은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

1) 존 버거, 장모르 저, 차미레 옮김(2021). 『제7의 인간』 눈빛, p.65.

2) 존 버거, 장모르 저, 차미레 옮김(2021). p.18.

동포³⁾, 유학생, 난민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주민이 1,778,918명,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주민이 185,728명, 외국인주민 자녀가 251,966명이다.⁴⁾

지역별 거주 현황을 보면, 경기도 720,090명으로 전체 32.5%가 집중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 465,885명(21.0%), 인천 130,292명(5.9%)로 외국인주민의 59.4%(1,316,267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는 25,892,678명으로 총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거주 현황을 보면 경남 134,675명(6.1%), 충남 127,057명(5.7%), 경북 104,596명(4.7%), 부산 77,968명(3.5%), 충북 74,880명(3.4%), 전남 68,719명(3.1%), 전북 62,151명(2.8%), 대구 53,023명(2.4%), 광주 43,053명(1.9%) 순이다. 이러한 통계자료에서 확인되듯, 오늘날 한국사회는 다인종·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지역별 외국인주민 분포 현황

한국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이 1,000명 이상 되는 국가는 26개국이다. 그중 중국 출신 외국인주민이 757,037명(42.6%)로 가장 많다. 베트남 197,340(11.1%), 태국 182,160명 (10.2%), 미국 78,539명(4.4%), 우즈베키스탄 62,076명(3.5%), 필리핀 50,217명(2.8%), 캄보디

3) 한국의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으로 구분된다. 외국국적동포는 출신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며,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조선족동포, 고려인동포가 대부분이다.

4) 행정안전부(2020).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아 45,475명(2.6%), 네팔 40,230명(2.3%), 인도네시아 396,360명(2.2%), 몽골 36,813명(2.1%), 카자흐스탄 29,009명(1.6%), 미얀마 27,592명(1.6%) 순이다. 이외에도 스리랑카, 러시아, 일본, 방글라데시, 대만, 캐나다,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 영국, 동티모르, 라오스 등이 있다.

광주광역시 체류 외국인주민은 2019년 현재 총 43,053명이다. 외국인주민 체류 현황을 최초로 조사한 2006년에 6,711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약 6배 이상 증가했다.

〈표 1〉 광주광역시 체류 외국인주민 연도별 현황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	2018	2019년
6,711	13,077	16,632	20,649	24,466	31,162	38,698	43,053

* 2006년 최초 조사 시에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만 대상으로 시범 작성

유형별로 보면, 이주노동자 7,312명(남 5,851명, 여 1,461명)이고, 결혼이민자는 3,635명(남 510명, 여 3,125명), 유학생은 6,156명(남 3,335명, 여 2,821명), 외국국적동포는 2,944명(남 1,526명, 1,418명), 기타 외국인인 13,329명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인 3,297명(남 254명, 여 3,043명)이며, 외국인주민자녀는 6,470명(남 3,405명, 여 3,065명)이다. 유형별 체류 규모를 보면 이주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순이다.

〈표 2〉 광주광역시 체류 외국인주민 유형별 분포 현황

구분	계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전체	43,053	7,312	3,635	6,156	2,944	13,239	3,297	6,470
동구	2,968	185	156	1,245	81	906	121	274
서구	3,788	513	478	96	222	1,123	460	896
남구	3,263	239	402	484	125	902	322	789
북구	9,700	807	1,035	1,974	339	2,769	890	1,886
광산구	23,334	5,568	1,564	2,357	2,177	7,539	1,504	2,25

출처: 행정안전부(2020)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 지역은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총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 지역을 말한다. 광주지역은 유일하게 광산구가 이에 해당된다. 광산구의 외국인주민은 총 23,334명으로 광주 전체의 54.2%를 차지하고 있다.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은 월곡2동에 가장 많으며, 하남동, 어룡동, 월곡1동, 평동, 첨단2동, 우산동, 수완동 등에 1천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 월곡2동, 어룡동, 하남동, 평동 등은 인근의 하남공단과 평동공단, 소촌공단이 있어 이주노동자들과 고려인동포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월곡2동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고려인마을’이라고 하는 고려인동포 특화거리가 형성되어 있다.

2. 이주민 그리고 사회통합의 현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선주민과 이주민 간 접촉 역시 활발해졌고, 일자리 경쟁, 위장 결혼, 문화 충돌, 외국인 범죄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⁵⁾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조선족동포, 난민 등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년(2010~2020)간 한국인의 다문화화에 대한 태도 변화의 조사 자료를 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 (60.6%→44.4%)이 감소해왔으며, 다문화화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 (2.4%→13.1%)는 증가해왔다. 반면, 단일민족·단일문화국가를 지향한다고 답한 비율은 조금씩 증가했다.

<표 3> 한국인의 다문화화에 대한 태도 변화 (2010~2020)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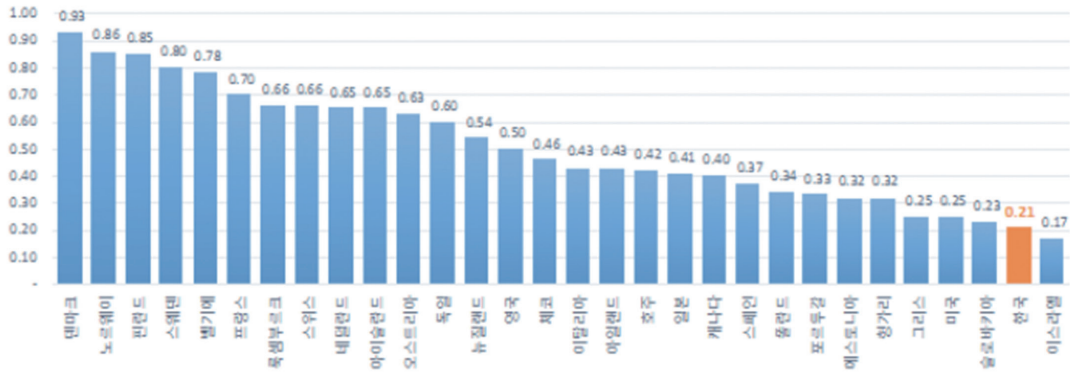
질문 보기	2010년	2015년	2020년
단일민족·단일문화국가	37.1	38.7	39.1
다민족·다문화국가	60.6	49.6	44.4
잘 모르겠다	2.4	11.7	13.1

자료: 최지혜, 조민호(2020), p.4.

한국의 사회통합수준의 실태를 보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사회통합지수(6)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은 1995년 이후 20년 동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 최지혜, 조민호(2020). “한국인 다문화 인식의 다양성.” 『EAI 워킹페이퍼』

6) 사회통합지수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 및 관리’ 등 4개 영역의 19개 지표 값을 근거로 산출된다.



〈그림 1〉 OECD 회원국의 사회통합지수(2015년 현재)⁷⁾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사회통합지수의 종합지수를 보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9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포용’ 항목은 다섯 차례 모두 꼴찌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사회갈등과 관리’ 항목은 1995년 21위에서 2015년 26위로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한국사회의 사회적 포용과 사회적 갈등 및 관리 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한국의 사회통합지수 추이 (1995~2015)

연도	종합지수		사회적 포용 ⁸⁾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 관리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순위	지수값
1995	29	0.257	30	0.198	23	0.411	26	0.393	21	0.537
2000	29	0.228	30	0.150	23	0.469	22	0.387	25	0.482
2005	29	1.198	30	0.257	22	0.517	27	0.274	25	0.365
2010	29	0.211	30	0.253	22	0.499	26	0.294	25	0.353
2015	29	0.207	30	0.266	22	0.521	24	0.344	26	0.377

자료: 정해식 외(2016).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42

7) 입소스 코리아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psos_korea&logNo=221469804675&categoryNo=6&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검색일: 2021.12.12.)

한국의 다문화정책에서 상대적으로(아시아권 국가 중) 선진적인 정책으로 평가되는 것이 있다. 바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주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⁹⁾ 2005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¹⁰⁾들은 지방선거에 한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의 수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6,726명이었으나, 2010년 12,875명, 2014년 48,428명,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06,205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외국인 선거권자의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6.7%, 2018년 13.5%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¹¹⁾

해외 국가들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대표적인 다인종·다문화국가인 캐나다에서는 이민자 통합프로그램인 ‘이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부와 지자체, 이주민, 지역공동체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원체계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국가정책 차원에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2006년부터 연방수상의 주재 아래 이주민단체, 이주관련 시민단체, 실무자, 기업체 대표들이 함께 모여 ‘이민자 통합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국민통합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인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외국인집주도시회의’라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방정부 간 연합체로서 다문화시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¹²⁾

3. 포용·공존의 사회로 가기 위한 탐색적 제언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요 국정전략으로 내세웠으며,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으로 선언하면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제와 독식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이며, 강자만을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모두를 위

8) ‘사회적 포용’은 사회 구성원이 제도를 통해 권리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사회적 포용 항목의 세부지표는 ‘상대 빈곤율’, ‘성별 격차’, ‘비정규직 고용 보호’, ‘비자발적 임시근로자 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을 위한 사회지출’ 등이다. 정해식(2016), p.222.

9) 정부는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으로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북 9곳, 충북 6곳 등이 지정됐다. 부산 3곳, 대구 2곳 등 일부 도심 지역도 포함되었다. 연합뉴스, 2021.10.18.,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7040400530>(검색일: 2021.10.15.)

10)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11) 김종갑, 김유정(2021)

12) <http://www.welfarenews.net>(검색일: 2021.12.13.)

한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특히 문재인대통령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은 정부의 국정비전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밝혔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회구성원간의 불평등, 양극화, 차별, 혐오 등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의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특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의 건강과 삶은 더욱 배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배제하지 않는 포용’과는 훨씬 거리가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미국의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의 해결책을 인용하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고든 올포트는 한 사회내 장애인, 성소수자, 비정규직, 가난한 사람, 외국인 등에 대한 적대감, 혐오,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입법’을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여전히 머나먼 여정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지만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두 거대 정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¹⁴⁾

다음은 광주정신에 기반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2018년에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입국하면서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사회적으로 확산된 바 있다. 당시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 조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찬성이 39.0%, 반대가 49.1%, 잘모르겠다가 11.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지역이 다른 지역과 달리 유일하게 찬성(50.7%)이 반대(39.6%)보다 높았다.¹⁵⁾ 주지하다시피, 광주는 민주·인권·평화의 정신과 가치를 일상화, 내면화하기 위해 광주인권현장과 인권지표를 마련해 인권도시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아울러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미래 비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공존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은 자신의 나라의 전통명절이나 축제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몽골의 나담 축제, 캄보디아의 쫄츠남 축제, 태국의 송크란 축제, 스리랑카의 알룻아우르프 축제 등이 개최되고 그들의 전통의상과 음식, 민속공연도 함께 어우러지는 다문화 축제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렇듯 이주민들은 어느덧 지역사회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광주에 정착한 이주민은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되고 인정받아야 한다. 나아가 그들의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어 제각각의 향기를 내고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공존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1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401>(검색일: 2021.12.13.)

14) 「경향신문」 2021/11/14

15) 지역별 결과를 보면, 부산경남울산-찬성 36.7%, 반대 55.1%; 경기인천-찬성 34.1%, 반대 54.3%; 대구경북-찬성 39.6%, 반대 46.8%; 대전충청세종-찬성 39.5%, 반대 46.6%; 서울-찬성 41.4%, 반대 44.0% 등이다. 「연합뉴스」 2018/06/21

참고문헌

- 김종갑·김유정(2021). “외국인 지방참정권 현황과 시사점.”『이슈와 논점』제1824호
- 정해식 외(2016).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존 버거·장모르 저, 차미례 옮김(2021). 『제7의 인간』눈빛
- 최지혜·조민효(2020). “한국인 다문화 인식의 다양성.”『EAI 워킹페이퍼』
- 한국행정연구원 박준 외(2021). 『국가포용성지수 개발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행정안전부(2020).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401>(검색일: 2021.12.13.)
- 입소스 코리아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psos_korea&logNo=221469804675&categoryNo=6&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검색일: 2021.12.12.)
- <http://www.welfarenews.net>(검색일: 2021.12.13.)
- 「경향신문」2021/11/14.
- 「연합뉴스」2018/06/21.

문화·예술 [3]

지역 회복을 위한 되살림 관광: 재생과 자생을 통한 포용적 로컬관광

이숙영

(주)좋은친구들 기획이사

「포용적 성장에서 지역관광은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 완화 등 지역발전의 유효한 전략이 되고 있다. 이에 관광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포용적 성장과 포용관광의 의미를 살펴보고, 재생과 자생, 연결을 통한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지속가능한 되살림 관광으로 포용적 로컬관광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 : 포용적 로컬관광, 되살림 관광, 지역회복, 재생, 자생, 포용적 성장, 포용관광

1. 들어가며

우리 사회는 거의 2년이 넘는 팬데믹으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도대체 팬데믹은 언제 끝날까? 올해는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높아진 백신 접종률에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과 획기적인 기술 발전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꿈꾸던 미래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

팬데믹 이후 경제·사회 회복에 중점을 두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사회 각 분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지역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속된 재택근무와 막혀버린 하늘길로 인해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도심을 떠나 산으로 들로 향하는 트렌드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여정의 도중에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여행이 큰 의미를 가지며 여행의 감동을 배가시키는 방법으로 고민이 이어졌다.

이제는 지역관광이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 완화 등 지역발전의 유효한 전략이 되고 있다. 이에 관광을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포용적 성장과 포용관광의 의미를 살펴보고, 재생과 자생, 연결을 통한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지속가능한 되살림 관광으로 포용적 관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포용적 성장과 포용관광

1) 포용적 성장과 포용관광의 개념

최근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은행(WB), OECD, 다보스포럼, 세계경제포럼(WEF), APEC, G20 등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동안의 핵심 이슈는 일자리 창출과 빈곤감소, 구조개혁, 성 평 등, 교육정책, 사회적 경제 지원, 공공인프라 정비 등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를 통하여 포용적 성장에 대한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유엔세계관광기구는 2000년대로 들어와서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논의와 함께 최근에는 포용적 관광에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유엔세계관광기구는 포용관광을 “관광지의 고유한 특성에 기초한 관광경험을 제공하고, 관광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산업의 변화가 수반되며,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게 관광(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누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UNWTO, 2018)”으로 규정하고 지역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포함한 관광공급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문화적, 환경적 가치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용적 성장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기치로 내걸고 포용과 혁신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혁신을 중점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관광 발전 방향도 포용적 성장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II에서 관광 부문의 핵심 과제로 포용적 성장과 지역관광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지역관광 발전에 포용적 성장을 중점 전략으로 추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관광산업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한 사회의 중요한 전략으로 지역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뿐만 아니라, 관광의 핵심 자원인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포용적 사회로의 변혁을 주도할 수 있다. 관광산업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포용적 성장 측면에서 관광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관광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인 논의가 부족하며, 포용적 성장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낮을 뿐만 아니라 이를 관광에 적용하

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2)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의 포용관광

2-1. 공급 측면의 포용적 관광

공급 측면에서 관광산업의 강점이자 특징은 중소기업들이 관광지의 서비스와 상품 제공에 주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체험, 외식 등 다양한 유형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관광 활동과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다양성은 지역에 인재를 유입하게 하여 지역의 포용성을 확대하고 관광지의 매력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에 포용적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사업화하는 시스템 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연계한 정책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예술가, 요리사 등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지닌 사람들이 관광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을 통해 지식이나 기술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광산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수요 측면의 포용적 관광

수요 측면에서 바라보는 포용적 관광은 관광 활동을 하나의 보편적 권리로써 개인이 지닌 특성과 무관하게 차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관광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포용적 관광을 수요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 세 가지 이슈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취약계층이 문화적 권리로 여행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당한 권리로 여행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경제적 취약계층의 관광활동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신체적인 제약요인을 지니고 있는 장애인들이 관광 활동에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이다. 셋째, 사회적인 차별 없이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이유로 관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이다. 이는 물리적 시설 문제가 아닌 사람들의 규범과 가치관의 변화를 도모하는 문제로 다양한 규범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사회적 관용성을 향상 시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3)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포용적 성장과 포용관광

포용적 성장이 지역관광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은 아니지만, 지역관광에 있어 '포용'이 새로운 경쟁력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용적 성장과 관광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정책 가치 창출은 물론이고 신규 시장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포용적 성장이 지역관광에 중요한 이유는 지역관광 자체의 어려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점(고용위기, 삶의 질 저하, 지역 불균형, 초고령화 등)을 해소하는데 적절하기 때문이다.

3. 지역 회복을 위한 되살림 관광: 재생과 자생을 통한 '포용적 로컬관광'

1) 지역 회복을 위한 되살림 관광

도시와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과 식물, 동물 모두 다 '생명체'이며, 여러 농어촌과 도시가 모여 이루는 '지역'도 우리의 국토도 생명체이다.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인 '재생'은 아파하는 지역, 죽어가는 지역을 되살리는 일이다. 경쟁과 효율에 기초한 개발 시대의 시대정신이 국가나 지역의 성장이었다면, 재생 시대의 시대정신은 상생과 연대에 기초한 '재생'과 '되살림'이다. 팬데믹 이후 광주라는 지역의 회복을 위해 지역관광을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지역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 완화 등 지역발전의 유효한 전략으로 '재생'을 통한 '자생'과 지역의 포용성을 확대하는 '연결'의 과정을 통한 '되살림 관광'으로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광주의 민관협력으로 추진 중인 마을재생 사업 중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우리동네 마을관광 마켓을 통한 신규 시장의 확대이다.

우리동네 마을관광 마켓은 마을재생 사업 중 '재생'이 '자생'이 되는 관광모델을 찾고, 지역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이 관광과 연결되는 관광자원화 정책으로 제안해 보는 관광플랫폼이다. 예를 들면 양동 청춘 발산마을의 할머니와 청년 콜라보 비즈니스 사업인 '쓸모아프로젝트'는 플라스틱 정류장을 통해 청년 창업과 노인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이를 지속가능한 힐링 여행인 '제로웨이스트' 관광으로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첨단2동 주민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는 '온 마을 배움터'는 '체험 여행'으로, 오래된 상점이 밀집한 구 양산 시장골목에서 진행 중인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드로잉 골목재생 프로젝트는 이야기와 예술이 만나는 '예술관광여행' 등으로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생태계를 조성해 볼 수 있다.

둘째, 포용적 측면에서 '기후위기', '생태', '배리어프리' 등 변화하는 관광시장에 대한 발 빠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모두를 위한 관광’은 공동체 차원에서 중요함은 물론, 변화하는 관광시장에 대한 대응하고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열린 관광지 선정을 통해 관광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명 관광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마을을 중심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관광환경과 서비스를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여행 장벽을 개선하고 기후위기, 생태 등 시대적 담론과 함께하는 인식전환과 실천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맞춤형 생활관광, 일상관광으로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는 포용적 회복이 중요하다.

최근 경제, 문화, 사회 관련 주목받는 개념으로 하이퍼로컬(hyperlocal)이 등장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맞추어진 생활 방식으로 역세권, 슬세권, 숲세권, 스세권, 맥세권 등 지칭하지만 관광에서는 지역의 생활 방식, 마을의 생활 방식을 직접 체험하며,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로컬관광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현 정부는 관광지의 과도한 집중을 예방하며 관광 매체와 관광 주체, 관광 객체 간의 공정한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21년 10월에 시행된 관광진흥법 <제48의 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을 보면, “에너지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라는 길고 복잡한 문구로 포용적 성장과 포용관광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관광 모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권을 여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과 함께 지역, 마을의 주요 콘텐츠를 기반으로 여행자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지역 맞춤형 생활관광, 일상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주민이 주인이 되고,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보존하고 관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되살림 관광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2) 지역의 재생과 자생을 통한 포용적 로컬관광

이렇게 마을재생 사업을 통한 마을관광 마켓이나 모두를 위한 생활관광, 일상관광사업 등은 지역의 경제적 개발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포용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이 지역관광의 문제해결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은 아니지만, 시대적 가치로서 지역관광의 혁신성장과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고, 개별적 사업 접근이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역관광사업을 혁신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이제는 ‘재생’에서 ‘자생’으로, 자생에서 연결을 통한 되살림을 통

해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지역의 노력이 단절되지 않고 포용적 성장의 목표와 비전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된 관점에서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관광은 '포용적 성장을 통해 모든 지역과 사람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실현'을 목표로 하는 포용적 로컬관광이 되어야 한다. 포용적 로컬관광은 배제되거나 소외됨 없이 모든 계층과 지역을 포괄하며 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자원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주체적인 관광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광객 만족도 제고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관광에 포용적 성장과 회복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고 모두를 위한 '여행공동체' 구현하며 '포용성 회복을 통한 지역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재생과 자생을 통해 '포용적 로컬관광'의 사회화로 이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2017),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
- 관계부처합동(2018), 쉽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2019), <http://www.balance.go.kr/index.do>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김난도(2021), 트렌드코리아 2022.
- 김희수(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과 포용적 성장, 한국경제포럼, 11(2), 59-92.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이익진(2019), 지역과 도시가 포용적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 KDI, 나라경제(1월호).
- 장병권(2018), '관광두레사업을 고도화할 때다', '무장애 관광종합대책을 조기 추진하자', '사람 중심적 관광정책의 추진방향', '혁신성장 시대의 관광산업 육성전략' 등 칼럼, 교통신문.
- 장병권(2019), 지역관광에서 포용적 성장의 방향과 과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II 발표자료(2019. 2. 12, 전주).
- 정석(2019), 천천히 재생.한국관광정책. 포용적 성장과 관광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No.75. 18-51.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2016), 포용적 성장의 거버넌스.
- OECD(2014), All on Board: 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
- OECD (2014), Report on the OECD Framework for Inclusive Growth.
- OECD(2018),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2018 Highlights.
- UNWTO(2018), Global Report on Inclusive Tourism Destinations: Model and Success Stories.
- WEF(2017), The 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Report.

코로나 19 이후, 도래한 포용사회를 위한 예술과 예술가의 역할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소외된 개인과 이웃을 살피는 것, 무언가 사회적 이슈로 가시화되는 과정을 살피는 것이며, 사회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술가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사회에서, 혹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매개자의 역할을 필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디지털 사회혁신은, 사회적 약자, 플랫폼에 포섭된 노동자들과 예술가들을 구제하는 방안과 디지털 약자들에 대한 대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지역 커뮤니티와 지역 거버넌스의 정책은 더욱 절실하다.

키워드 : 디지털사회혁신, 디지털포용, 플랫폼

1. 포용사회와 포용국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불평등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불평등의 반대말은 평등인데 왜 포용사회로 표현을 했을까 라는 것이다. 포용이라는 개념은 사전적 의미로 ‘아량 있고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이다. 남을 아량 있고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임’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 몇몇의 학자들은 포용이라는 개념을 ‘이질성과 다양성에 대한 관용, 수용, 변용으로 더 넓은 상태로의 진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엄밀히 따지면 포용(包容)은 관용(寬容)에서 나온 말이다.

‘생각·사상·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생활양식의 요소’라는 정도의 뜻을 가진 관용은 프랑스어로 톨레랑스(tolerance)라고 말하는데, 자신과는 다른 타인과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하면 그 차이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관용은 처음 종교에 대한 자유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종교계에 관련된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의 절대성과 우월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와는 다른 종교를 거부하거나 배격하기 쉽다. 하지만 칼빈,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타종교에 대한 관용 정신이 생겨났으며, 이후 이어진 시민혁명에 의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즉 피부 색깔, 신체, 종교, 사상, 성 등 여러 차이에 대해서 차별이나 무관심이 아닌, 서로 다른 점으로 받아들이는 정신을 말한다. 하지만 포용은 말하는 쪽과 들어야 하는 쪽 모두가 먼저 인정의 단계를 공정하게 거쳐야 한다. 공

정함에는 사실과 더불어 감성도 당연히 동반될 것이다. 포용은 주고도 기분이 좋아야 하고 받고도 기분이 상하지 않아야 하는 지극히 어려운 행위이면서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정신적인 교감과 수평적인 소통인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18년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3대 비전, 9대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포용사회를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뗀 것이다. 이후, 정부는 사회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정부가 말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고 한다. '발전국가' 패러다임이 경제 성장을, 신자유주의가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였다면, '혁신적 포용국가'는 국정 운영의 중심에 '사람'을 두고 일반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도 사회의 '포용성' 향상과 '혁신능력' 배양을 장기적 국가발전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로 보고 적극적인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9대 전략의 키워드는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있는 분야를 설정했다.

2. 포용사회에서 예술의 역할과 가치

그렇다면 포용사회에서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해야하고 지향해야 할까? 예술이란 함의에는 이미 포용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예술은 매우 구체적인 행위를 동반한다. 인간이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예술의 영역이며 이것들의 행위 자체로 존재하며 의미를 갖는다. 그리는 것, 노래하는 것, 움직이는 것, 만드는 것, 쓰는 것, 소리 내는 것, 표현하는 것 등. 하지만 예술이 우리 사회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은 예술가가 창작의 원천을 사회로 향할 때이다.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예술가라는 개인의 삶, 혹은 예술의 지난 한 과정보다 예술이 사회적 가치를 증명해내는 다양한 현장에 더 관심을 두는 것에서부터 온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예술가는 포용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이슈 속으로 들어가 문제점을 발굴하고 구심점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이다. 그러나 예술의 진정한 역할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소외된 개인과 이웃을 살피는 것, 무언가 사회적 이슈로 가시화되는 과정을 살피는 것이 아닐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의 이슈가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 어떤 과정과 실행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예술이 할 일이 아닐지 말이다.

그런 이유에서 예술은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혹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매개자의 역할을 필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예술가가 자신의 창작활동을 온전히 지켜내는 행위야말로 가장 치열한 예술행위이자 사회적 가치를 발현하는 일이다. 왜냐면 예술가는 사회적 변화를 위한 기능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존재로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포용사회에서 예술의 역할과 가치는, 정책이나 사회적 해결방안이 다양성을 담을 수 있도록 자극하고, 소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유도하는 일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유행하고 따뜻한 예술도 있지만 우울하고 냉소적이거나 모호한 예술도 있다. 그러나 예술이 어떤 자세를 취하든 각기 다른 사회적 가치와 의의를 지닐 것이다.

3. 포용사회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의 정책(디지털 포용과 지역 예술가)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분명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모두가 단언하고 있는 가운데, 포용사회로 가기 위한 지역 커뮤니티의 지향은 명백하게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이겨내면서도 함께 공존을 하는 것이다.

현재 백신을 맞으면 조금 나아지리라는 예상을 깨고 새로운 변이가 출몰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이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구촌의 모든 분야의 산업과 일상이 위협을 받고 위기에 처했지만,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거의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고사 직전에 놓여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은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하다. 사람이 모여야만 일이 되는 공연산업 분야는 부도와 파산이 속출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로 이직을 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비접촉문화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랜선 공연이라는 온라인 공연이 대두되며 플랫폼의 역할과 활용이 급격하고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같은 글로벌 거대기업들의 온라인 플랫폼과 OTT(Over the Top) 선점 싸움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온라인(랜선)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지만 여기엔 큰 문제가 숨어있다. 이용자가 항상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브랜드가 되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 이를테면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비주얼적으로 디자인이 뛰어나지 않거나, 콘텐츠가 혁신적이지 않은 플

랫폼에는 유저들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들의 온라인 독점은 심화 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자본의 독식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영세 예술인들, 특히 지역 예술인들에겐 그들의 창작물이 랜선을 통하여 서비스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갈수록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 자명하다. 물론 개인적이거나 몇몇 기관이나 단체의 플랫폼을 통하여 서비스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나 수익모델로 자리잡거나 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하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왜냐면 라이브 공연장에서의 경험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연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공연장을 찾았던 관객들은 단순한 스트리밍 이상의 경험과 가치를 온라인 공연 관람에서 기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예술가들이 집이나 작업실 같은 개인적 공간에서 작은 라이브 공연을 열어 팬들과 유대관계를 친밀하게 쌓는 일은 코로나 19 이전에도 하우스 콘서트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 주요 플랫폼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료 온라인 공연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모두 얘기를 한다.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이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에서 팬들과 만나고 있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의 예술가에 한정되는 얘기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에겐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 예술가들 역시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작금의 디지털 기술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격차 수준이 매우 가파르고, 양극화 현상으로 이미 굳어진 현실이 돼버렸다. '위드(with) 코로나'를 준비하는 지금, 디지털 양극화를 완화하고, 디지털 기술이 모두를 위한 기술로 안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디지털은 단순히 편리함 이상, 사회 전반의 핵심적 시스템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역량은 곧 생활의 질, 안전과 직결되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국민 모두가 소외와 배제 없이 기술의 혜택을 누리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디지털 포용' 사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디지털 포용은 글로벌 의제로 부상했다. 2019년에 OECD가 'Going Digital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로 가능한 혜택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균등하게 누리기 위한 디지털 통합 프레임 워크를 제시한 배경이다. 해외 주요국들 역시 '디지털 포용'의 가치와 전략을 국가 디지털 전략·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7대 디지털 종합 전략에 디지털 포용을 포함하고, 세부 정책 과제를 추진 중이다. 지역 도서관을 거점으로 광범위한 디지털 활용 교육을 시행하며, 여기에서 소외 대상이 발생하지 않

도록 취약대상 및 미래 세대들에게 초점을 맞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유관 기관과 지역 거점기관이 연계하여 디지털 포용 자원을 맵으로 구축했다. 이 ‘디지털 포용 지도(Digital Inclusion Map)’는 컴퓨터·인터넷 사용 접근성, 교육 및 기관 정보, 연구 및 프로젝트 정보 등 약 1,170여 개의 디지털 포용 자원을 오픈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미국은 디지털 기술을 잘 다루는 청소년이 시니어 세대에게 디지털 학습을 제공하는 사이버 시니어(Cyber Seniors)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디지털 활용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참여한 청소년과 고령층 대상자 모두에게 리워드를 제공한다. 디지털 양극화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 중 세대 간 공감대 형성에 디지털을 매개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각 나라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디지털 포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역량 교육, 환경 구축, 활용 분야 확장, 법·제도 기반 조성 등 정부 주도의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보다 적극적 차원의 정책으로 디지털 양극화 해소에 나선 것이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 참석하여 “국민 모두가 격차 없이 디지털로 혜택을 누릴 때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12월 1일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정보통신방송 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대비하여 브로드밴드 연결성 강화와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위한 범아시아 ICT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아시아 국가와 ‘포용적 사회 재건’을 위한 디지털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뉴노멀 시대 동반자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 포용사회 혹은 포용적 디지털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있지만, 문제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데 있다. 현재 플랫폼(기업)들은 이용자(유저)들을 포용이 아니라 포섭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된다. 무척 비관적인 현실인바, 오히려 우리는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지역 커뮤니티에 절실하게 필요한 대안을

추구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대로 시장에 항복해버리면 메타거버넌스의 관점이 그대로 플랫폼 기술에 적용되면서 결국은 플랫폼 독점현상이 더 가중될 것이다. 물론 지역의 정책이나 대안이 시장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디지털 불균형을 보완할 방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유경제나 공유사회 등등의 정책들은 매우 더디거나 성과가 다소 미흡한 현실에서 4대 주요 플랫폼(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의 독점은 가속되고 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디지털사회혁신은 정부주도가 아니라 시민참여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플랫폼에 포용이 아니라 포섭된 노동자들과 예술가들을 구제하는 방안과 디지털 약자들에 대한 대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지역 커뮤니티와 지역 거버넌스의 정책은 더욱 절실하다. 디지털 포용이 정책적으로 가시화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디지털포용이란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디지털 기술에 접근 가능성 및 이용 능력과 상관없이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커뮤니티(지역 거버넌스)는 지역 예술가를 위한, 디지털 관련 정책과 혁신에 심혈을 기울여만 한다. 전술한 것처럼 공연장 대신에 거실과 안방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을 보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으며, 이런 현실은 대부분의 지역 예술가들에겐 그림의 떡 같은 현실인바,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